미술은 산업이다 II

미술인을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

미술은 산업이다 II

미술인을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

일시 | 2022년 10월 14일(금) 오후 2시~4시 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01_ 미술의 산업적 가치와 사회적 역할
02_ 일상의 삶이 예술이 되다
03_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선택적 기금제 개선 방안

공동주최 김학용 국회의원실, (사)한국조각가협회, (사)한국미술협회
주 관 미술제도개선 TF팀 위원회

공동주최 김학용 국회의원실, (사)한국조각가협회, (사)한국미술협회
주 관 미술제도개선 TF팀 위원회

미술은 산업이다 Ⅱ

미술인을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

CONTENTS

01_ 산업적 가치와 사회적 역할 5
김 윤 섭(아이프aif 미술경영연구소 대표)

02_ 일상의 삶이 예술이 되다. 17
이 은 호(공공미술 기획자, 현대리바트 아트랩 실장)

03_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선택적 기금제 개선 방안 25
이 성 옥(미술제도개선 TF팀 공동위원장)

| 이 후 창(한국조각가협회 사무국장)

미술은 산업이다 Ⅱ
미술인을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

01

산업적 가치와 사회적 역할

김 윤 섭
(아이프aif 미술경영연구소 대표)

산업적 가치와 사회적 역할

김 윤 섭(아이프aif 미술경영연구소 대표)

"화가들이 혼자 사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늘 생각해 왔다. 고립되어 있으면 늘 패배하기 마련이거든. … 이 계획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보려는 의도도 있다."(1888년 5월)[1)]

평생 고독한 예술가의 표본으로 살다 간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역시 '고립에서 비롯되는 패배를 넘어서기 위해 서로 돕는 작가공동체'를 진지하게 고민했었다. 미술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이 사회적으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어쩌면 미술의 공공적이고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는데 기본적인 개념이 될 수도 있겠다. 결국 '예술+테크놀로지+도시+환경' 등의 공생 관계를 되짚어보고, '예술을 매개로 한 보다 나은 내일의 비전'을 지향하는 미술의 공공성고 순기능은 무엇이며, 수요자 입장에서 공공미술 그 너머의 지속 가능한 산업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원론적인 고민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특히 2000년대를 넘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문화의 세기를 맞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다른 한편으론 "문화에 대한 사유(思惟)가 척박한 우리의 사회에서 '문화의 세기'를 말한다는 것이 자칫 거품이나 허세에 지니지 않을까"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때 이른 기대감이든 허세이든, 문화가 생활의 중심으로 들어왔고, 국제 사회에서도 한국의 위상이 경제보다 문화적으로 더 큰 확장세라는 것은 분명해졌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문화적 혜택을 우리가 일상에서 편안하고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더불어 문화예술이 지닌 잠재적 역량을 경제적이고 산업적인 가치의 발현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가도 중요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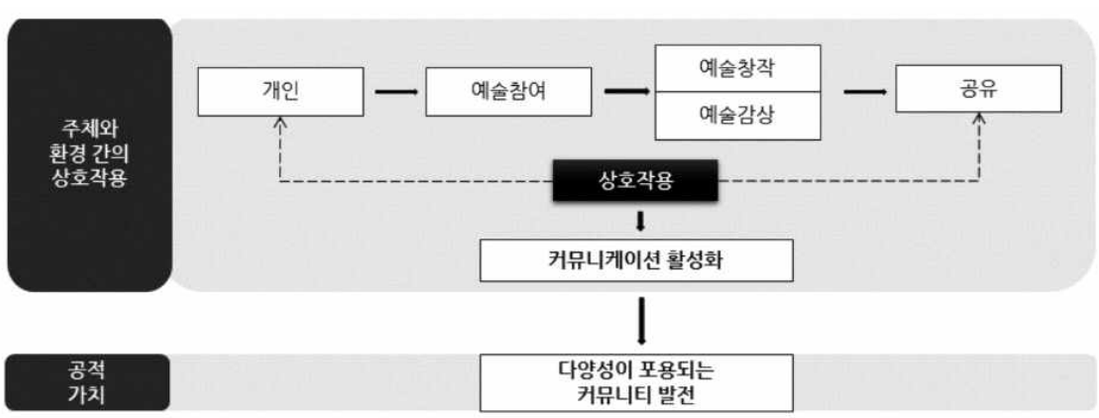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겼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인 한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정부의 자립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제각각 지

1) 반 고흐/신성림역, 『영혼의 편지』, (서울:예담,2004), p.160~162.

역의 균형발전의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그리고 지방정부에 기대하는 거주민의 기호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불과 10~20년 전만 해도 '먹거리' 우선의 제조공장 유치가 최선이었다면, 지금은 '살거리'라는 삶의 질적 수준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 살아가는 일상생활이 얼마나 문화적으로 윤택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점차 중시되고 있다. 그래서 문화적 테마의 휴게공간이 각광받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미술의 공공성이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2019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예술감독 이후 발표했던 내용 중 '미술의 공공성과 더불어 사회적 가치와 산업적 역할' 측면에서 정리해본다.

미술의 공공성과 사회적 기여

과연 문화예술은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선 미국의 철학자이자 교육자인 존 듀이(John Dewey, 1859~1952)의 견해를 빌면 이해가 쉽겠다. 존 듀이는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예술을 해석했다.[2] 듀이는 미적 경험을 작품의 창작 및 감상의 경험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환경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했다. 이 과정에서 문화예술의 공적 가치를 '창작과 감상 과정에서 이뤄지는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하는 의사소통에서 찾았다. 존 듀이의 이론은 개인의 예술경험이 어떻게 사회적 논의로 확장될 수 있는가에 대해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는 고립된 대상으로써의 예술이 아니라,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했기 때문에 '사회문제에 대한 예술적 개입'의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예술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와 삶은 예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루는 '실천적 차원(practical dimension)', 그리고 예술가 및 감상자가 행하고 겪는 경험의 현장성을 다루는 '현상적 차원(phenomenological dimension)'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그림 1] 듀이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예술의 공적가치 발전 모형

2) 민경선, 지속가능한 사회와 문화예술-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서 뮤지엄의 역할, IDI도시연구, p.231

존 듀이의 시각에서 삶은 다양한 환경적 요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존속되기에, 인간의 경험 자체를 미적 경험과 관련짓는 것 역시 가능할 것이다. 작품의 창작 및 감상의 경험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환경간의 상호작용을 미술의 공공영역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미적 경험을 '인간의 모든 활동에서의 예술과 일상적 경험'이 결부되었다는 접근도 용이해진다. 결국 예술 경험은 주체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될 수 있고, 인간의 일상적 경험과 미적 경험을 연결시킴으로써 예술이 공적가치 실현의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한다고 하겠다.

미술의 공공성이 지닌 패러다임 변화

한국 미술의 공공성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크게 보면 '이념을 위한 공공미술'에서 '공존을 위한 공공미술'로의 전환이다. 장식성에 치중하며 정치적이고 계몽적인 성격을 보여주던 공공미술이 점차 일상 환경의 개선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역할로 확장된 것이다. 여기에 지역공동체의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미술의 공공성과 사회적 역할론'도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일명 '로컬시대의 공공미술'로 불리며, 공공장소에 모뉴먼트(monument) 성격으로 세워지거나 벽화로 장식됐던 것에서 '시민이 참여하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공의 미술'로 그 범주가 확장되는 과정에 서 있다.

> 공공미술은 삶의 구체적 처소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는 예술적 행위이며, 무세계(無世界)를 강조하는 삶의 공간에 사람이 머물고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세상'을 놓는 사회문화적 행위이다.[3)]

미술평론가 최태만은 '공공미술의 사회문화적 행위'를 강조했다. 이러한 '사회참여형 도시재생 관점'이 고려된 국내외 공공미술 사례들은 많다. 우선 한국의 마을미술프로젝트·서울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통영 동피랑마을 문화관광지화, 영국의 크리에이티브 포크스톤·게이즈헤드 도시재생 프로젝트, 일본의 나오시마아트프로젝트 에치코츠마리트리엔날레·더아트하우스프로젝트, 미국의 시카고밀레니엄파크공공미술, 슬로바키아의 포인트제로프로젝트, 중국 선양시 도시공공미술프로젝트 등 최근 들어선 생각보다 그 수가 크게 늘고 있다. 대개 첫 출발은 산업화나 인구증가 등으로 인해 도시에서 벌어지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공공예술 개념이 등장했

3) 최태만, 한국 시각예술의 과제와 전망, 다할미디어, 2009, p.281

지만, 지역사회 공동화(空洞化)와 산업공동화(産業空洞化, hollowing of industry) 등의 보완을 위한 대안으로도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공공미술에서 공적영역을 지나치게 '장소' 중심으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으며,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대중이 얼마나 그 장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public access)를 공공성의 척도로 상정한다.[4] 만약 이런 식으로 국한된다면 '공공미술은 단지 물리적 공간에 물질 형태의 작품을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되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흔히 공공미술에 대한 이해를 대형 빌딩 앞의 '환경조형물'이나 '미술장식품' 정도로 이해하는 것도 축소된 의미의 공적영역과 공공성을 보여주는 경우이다. 제대로 된 공공미술의 범주는 현실의 특정 장소를 포함함과 동시에 미술이 사회 체제 및 주체들과 사회정치적으로 만나고 감성적으로 어우러지는 경계를 포함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공적 역할의 미술'이 사회 전반에 감성적 교감과 소통의 기능을 넘어 산업적 측면으로까지 확장되는 예가 많아졌다. 단지 한 창작자나 수혜자(집단)만을 위한 쌍방향 역할이 아니라, 공적 범위에 나선 미술작품 자체가 별도의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국제무대에서 한국미술의 위상과 미술시장의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다. 과연 새로운 미술의 기능성과 산업적 부대효과의 범위를 어떻게 넓혀 갈 것인가라는 측면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공공미술 용어와 시대적 변천

공공미술(公共美術) 측면에서만 본다면 용어적 의미가 시대에 따라 일부 변모해왔다. 우선 보편적인 정의는 '단순히 지역사회를 위해 제작되고 지역사회가 소유하는 미술'로 일컬어진다. 또한 이 공공미술(public art)이란 용어는 1967년 영국의 미술행정가 존 윌렛(John Willet)의 저서 『도시 속의 미술(Art in a City)』에서 처음 언급했다고 전해진다. 윌렛의 공공미술 정의는 '미술을 전시장 밖으로 확대하여 전시장 예술과 대립하는 의미'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미술의 대중화 차원에서 맥을 같이 하였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는 1960년대 말 미국 정부에서 시작한 두 가지 제도에 의해 공공미술 개념은 더욱 확산되었다, 즉 미국 정부(국립예술기금)의 주도로 진행된 '미술을 위한 일정지분투자' 프로그램과 '공공장소의 미술(Art in Public Place)' 프로그램과 직접

4) 강수미, 공동체를 위한 예술과 공공미술, 현대미술학 논문집(12), 2008, p13

적으로 관련된다. 이 중의 '미술을 위한 일정지분투자' 프로그램은 우리에겐 흔히 '건축물 미술장식물 1%법'으로 익숙한 제도이다.

공공미술은 서구의 경우 제도 초기부터 사용해온 용어이다. 윌렛은 공공미술가 도시 공동체 전반(도시 분위기+건축적 구조+도시 구성원의 감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82년에서야 문예진흥법 입법을 통해 미국의 '퍼센트법'을 절충 모방한 '건축물 미술장식제도'로 시작했다. 이후 '환경미술', '환경조각', '환경조형물' 등 협소한 개념의 용어로 혼용되다가, 1990년 후반에서야 '미술장식제도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점차 '공공미술'이란 용어가 확산되어 통용되기 시작하였다. 공공미술이란 용어엔 장식물 이상의 사회적 개념이 들어 있다는 가정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예술은 대화와 몰입을 유도하고 다양한 구성원 간의 교류와 연결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사회적 관계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공유된 경험은 사회자본 중 하나인 신뢰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개인들의 관계를 촉발・유지・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5] 한국의 공공미술은 위에서도 언급하였듯 2000년 이전까지 주로 기념적인 성격[monument]의 동상 조각이나 전쟁기념물, 환경조각 등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다. 일제부터 제작되었던 동상 조각과 기념물의 건립은 해방 이후에도 한동안 그대로 지속되었으며, 한국전쟁을 지나면서 1950년대엔 추모적인 성격의 충혼탑이나 전쟁 용사를 기리기 위한 동상들이 전국에 퍼져나갔다.

1960년에서 70년대에는 각종 동상 조각들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세워지기 시작했다. 이는 반공과 민족주의를 고취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각종 기념조형물과 동상들은 공공장소 속에 놓여있다는 이유로 공공미술의 범주로 간주되었다. 그 이면에는 사실상 국가 권력의 상징과 이데올로기적 생산에 목적을 두었다. 1980년대는 공공미술의 제도적 출발점 시대였다. 이 시기의 공공미술이란 용어는 '벽을 장식하는 용도의 환경미술' 정도를 가리켰다. 일명 '건축물미술장식법'[6]이 제정되면서 도시 내 대형건물 앞을 장식품으로 조각이 활용되었다. 이 제도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같은 국제적 행사를 치르기 위한 '도시환경미화'가 주된 목적이었다. 그러다보니 국제적으로 저명한 조각가의 작품을 설치하는 예가 다반사였다. 이 제도는 2011년 5월 25일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장식'을 '작품'으로 변경하여 '건축물

5) 김인설, 「사회자본 증진을 위한 촉매로서의 예술 - 예술기반 실행연구 (Art-based Action Research) 사례와 문화정책적 함의」, 『문화정책논총』27-2, 한국 문화관광연구원, 2013, p.136

6) 1982년 문화예술진흥법에 '건축물에 대한 미술 장식' 조항을 신설하면서부터 도입된 제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비용의 1퍼센트를 들여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규정 한 것이며, 1986년 아시안게임 직전인 1984년에 서울시가 이를 의무조항으로 전환했다.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전국 시도가 의무화를 뒤따랐다.

미술작품법'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또한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적 기금제'를 병행하게 되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작가와 기획자 중심의 소규모 프로젝트 위주로 지역 중심의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진행되다가, 2000년대 후반부터는 정부나 지자체가 주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진행되기 시작한다. 공공미술의 수요 자체가 개인이 아닌 공동체나 기관(지역)에서 공적 자금이나 기타 후원으로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과 같은 제도로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공공미술의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2006년엔 문화관광부가 '공공미술추진위원회'를 출범하면서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공공미술추진위원회는 낙후된 지역의 환경개선과 지역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활동에 주력했다. 가령 '아트 인 시티'사업이나 '마을미술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예이다.

2009년 시작된 마을미술프로젝트(Maeulmisul Art Project)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국가 주도형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전형이다. 이는 '문화형 복지'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물론 중앙문화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 작가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종의 '예술 뉴딜정책[7]'을 목표로 시작된 것이다. 결국 마을미술프로젝트는 '공공미술을 통한 소외 지역 문화 환경 조성'의 취지를 갖고 있다. 명칭의 '마을'에서 짐작되듯 지역 주민의 참여를 중요하며,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작은 단위 중심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지향한다. 나아가 2013년부터 시행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시범사업인 '공공미술 2.0' 프로젝트는 새로운 공공미술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기존 공공미술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바탕으로 '장소와 공공성에 대한 이해, 참여 주체로서 지역 주민에 대한 고려, 지속적인 사업 동력의 발굴' 등을 세부 항목으로 꼽을 수 있겠다.

반면 공공미술에 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공공미술이 건당 수백에서 억대를 오가는 '사업'으로만 치부된다든가, 단지 일시적인 성과중심의 사업방식으로 전락한다면 공공미술은 더 이상 발전적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국가 혹은 민간단체 의한 공공미술은 궁극적으로 '도시미관을 살리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예술작업'이란 취지를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나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사회에 대한 새로운 담론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의무'를 간과해선 안 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수적인 산물들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7) 미국 제32대 대통령 F.D.루스벨트의 지도 아래 대공황 극복을 위하여 1930년대에 추진하였던 제반 정책. 경제난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사업을 벌여 일자리를 창출해 실업자들을 일하게 만들고 다시 소비 등 수요를 일으켜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시행됐다.[네이버 지식백과] 뉴딜정책 [New Deal] (한경 경제용어사전)

주변에 관주도형으로 시행된 공공미술의 실패사례는 주민 참여형 혹은 주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확인하게 해준다. 미술평론가 심상용의 "'공공적 예술(Public-Spirited Art)'에서 적절한 사회적 단위의 문제는 작가가 창작의 순간 구체적으로 '누구'를 떠올리는가의 질문으로 함축될 수 있다"[8]는 지적도 되새겨 볼 대목이다. 결국은 공공미술이란 용어에는 '미술의 전방위적인 역할과 범위'를 포괄하고, 새롭게 창출되는 가치를 어떻게 효용성 있게 활용해나갈 것인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미술의 공적 개념과 범위의 확장

미술에 대한 공적 개념과 성격은 시대에 따라 변모해왔다. 공공미술의 개념 변화[9]는 크게 건축 속의 미술(Art in Architecture), 공공장소 속의 미술(Art in Public Places), 도시계획 속의 미술(Art in Urban Design),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New Genre Public Art)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중에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New Genre Public Art)'은 '지역사회에 기반한 공공미술(community-based public art)' 또는 '공공의 이해에 관심을 갖는 미술(art in public interest)'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보다 자세한 비교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미술 공적 개념의 양상과 특징

키워드	개념 및 특징
건축 Architecture	**1세대: 건축 속의 미술** (Art in Architecture)
	– 미술작품을 통한 정부 건물의 미적 가치 제고 – 미술의 전시적 기능 위주 – 프랑스 1%법(1951), 미국 연방정부 공공시설청(GSA) '건축 속의 미술 프로그램'(1963) – 작품경향 : 순수미술 위주
장소 Space	**2세대: 공공장소 속의 미술** (Art in Public Space)
	– 공공장소(공원・광장)의 시각적 활성화 – 초기 스튜디오 작품을 키워 공공장소에 설치한 '플럽 아트(Plop Art)'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점차 공공장소의 맥락 고려 – 미국 국립예술진흥기금(NEA) '공공장소 속의 미술 프로그램'(1967년), 자치단체의 '미술을 위한 퍼센트법' – 점차 공공장소의 컨텍스트에 적합한 미술로 변화되면서 공공미술은 미술과 삶의 결합을

8) 심상용, 공공미술(Public Art)의 비평적 단초 찾기, 현대미술학 논문집(12), 2008, p173
9) 양현미, 「공공미술의 제도적 기반」, 『현대미술사연구』 제16집, 2004, pp.178~182

키워드	개념 및 특징
	지향하는 미술로써 기존 전시장(미술관・화랑) 미술과 달라짐 – 순수미술 위주였다가 공공미술의 독특한 정체성이 형성됨
도시 Urban	**3세대: 도시계획 속의 미술** (Art in Urban Design)
	–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공공미술종합계획 수립, 기금제가 도입됨 – 공공미술을 통한 도시 공공공간의 인간화와 네트워크화 – 도시디자인팀에 미술가 참여가 제도화됨 – 미술품 이외에 미술가가 디자인한 가로시설물・공원・문화시설・문화 프로그램 등으로 공공미술 영역이 확장됨 – 라데팡스・바르셀로나・필라델피아・댈러스・로스앤젤레스 등에서 시행하여 문화적인 도시 환경 조성에 큰 성과를 거두었음
새로운 New	**4세대: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 (New Genre Public Art)
	– 1970년대 미국 주민벽화운동과 1980년대 시카고 공공미술 프로그램에서 시작 – 미술을 통한 시민간의 커뮤니케이션 확대와 시민 문화 공동체 형성. 결과보다는 과정 중시, 특히 주민 참여가 필수적 요소 – 시민에 대한 문화 교육적 효과를 겨냥한 비디오 제작・퍼포먼스・미술공방 운영・정원 가꾸기 등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 – 장르도 시각예술의 영역을 넘어서 영화・비디오・공연 등으로까지 확장

특히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New Genre Public Art)' 개념은 미술이론가 수잔 레이시(Suzane Lacy)의 말이다. 수잔 레이시는 "전통적 또는 비전통적 매체를 사용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관객과 함께 그들의 삶과 직접 관련된 이슈들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상호작용하는 시각예술"로 정의 했다. 더불어 공공미술은 공공성・사회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공동체를 만드는데 유효할 뿐만 아니라 생태적 가치라는 목적을 위해 활용되기도 한다. 위의 표와 같이 공공미술은 1세대 건축 속의 미술(art in architecture), 2세대 공공장소 속의 미술(art in public space), 3세대 도시 디자인 속의 공공미술(art in urban design), 4세대 뉴 장르 공공미술(new genre public art)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생태와 안전'이라는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 예술을 '하나의 도구'로 설정하는 '5세대 요구형 공공미술(new needs add art)'[10]로 발전해가고 있다. 보충하자면 4세대까지의 공공미술은 과정과 결과에서 사람들 간의 갈등, 극단적 행위를 유연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같은 '유연한 소통'은 공동체 간 소통의 매개체

10) 주미옥, 「시대적 변화로 살펴본 공공미술과 공동체미술의 향후 방향성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21-1,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5, p.528

로 활용될 수 있으며, 사실상 공공미술의 성공과 발전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로 평가된다.[11] 한편 최근의 5세대 요구형 공공미술은 안전, 셉테드(CPTED), 환경문제와 같은 구체적인 사회문제, 공동 관심사를 배경으로 공동체 미술을 활성화한다.[12] 한편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의 공공성은 아직까지는 물리적 토대가 부족하여 단발적인 시류로만 머물 위험이 있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나아가 사람들을 제작과정에 참여시키고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지만, 실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셈이다.

그 연장선에서 호주의 문화이론가인 존 혹스(Jon Hawkes)는 "기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가 구성요소인 환경・경제・사회 등의 모델을 수정하여 문화를 포함한 '네 기둥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13]고 주장했다. 혹스에 의하면 문화는 '사회의 가치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치가 발전되고 표현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는 예술을 통해 가치를 발견하고 의미를 표현해왔으며, 현 시대에도 여전히 그 가치를 표현하는데 의미 있는 방식으로 예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미술의 공적 역할 역시 그의 연장선에서 바라볼 때, 다양한 산업적 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게 되리라 기대한다.□

필자 소개 |

미술평론가 김윤섭은 명지대 대학원에서 미술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22 그림의 탄생전 총괄기획, 2022 디아트플레이스 HMC 전시감독, 2021 경주국제레지던시아트페스타 전시감독, 2019 안양국제공공예술프로젝트(APAP) 예술감독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숙명여자대학교 겸임교수,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 정부미술은행 운영위원, 인천국제공항 문화예술자문위원, (사)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전문위원, 대한적십자사 문화나눔프로젝트 아트디렉터, 서울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위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이사, 아이프AIF 아트매니지먼트 대표 등으로 활동 중이다.

11) 주미옥, 같은 논문, p.533
12) 주미옥, 같은 논문, p.529
13) 존 혹스(Jon Hawkes), 『지속가능성의 네 번째 기둥 : 공공계획에서 문화의 필수 역할(The Fourth Pillar of Sustainability: Culture's essential role in public planning)』(2001) 참조

미술은 산업이다 Ⅱ
미술인을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

02

삶이 예술이 되다.

이 은 호
(공공미술 기획자, 현대리바트 아트랩 실장)

삶이 예술이 되다.

– 전환과 모색 –

이 은 호(공공미술 기획자, 현대리바트 아트랩 실장)

필자는 예술가, 디자이너, 건축가, 조경가, 마케터 등 각 아트 프로젝트에 적합한 전문가와 협업해 예술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실행하였다. 예술 작품이 단순히 생활 공간 속에 맥락 없이 이식되어 놓이는 형태가 아니라 장소성을 고려해 공간과 조화롭게 융합된 작품을 제안하기 위해 고민하였다. 또한 실용적인 면과 심미적인 부분이 만나는 예술의 교차점에 대해 기업이 가져야 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인 영리의 목적 중간에서 연구, 제시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의 현실과 극복

건축물의 시행사(건축주)가 준공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 아래 빠른 일 처리와 비용절감을 위해 건축물과 어울리지 않는 작품들이 설치되어왔다. 그동안 소수의 작가나 화랑에 의지하여 선정하는 경우가 많았고 은밀한 뒷거래는 당연하다는 인식이었다. 경쟁에서 당선되기 위해 예술성보다는 미술에 조예가 깊지 않은 건축주의 입맛에 맞는 장식적이고 일차원적 발상의 조형물들이 주로 만들어져 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몇몇의 경우, 건축허가 부서에서 특정 작가나 업체와 유착하여 인허가를 빌미로 건축주에게 알선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을 미술계가 자초하였다고 비판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트컨설팅 기획사와 작가는 건축물과 공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작가 본연의 정수가 드러나는 창의적이고 심미적 접근으로 공공이 공감할 수 있는 예술작품에 집중해야 법 제정 취지가 무색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는 지자체나 정치권의 개입이 작품의 질과 수준을 떨어트리고 시각적 공해를 만들어내는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몇몇 지자체에서는 강제적으로 공개 공모를 통해 작품을 선정하고 있지만 선정과정이 투명하지 못해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것이 중론이다. 공개 공모는 이미 판이 짜여 있다는 인상이 큰 만큼 역량 있는 작가들의 참여가 낮아 하향 평준화되기 마련이다. 나아가 작품이 설치될 공간에 대한 예술적 고민이 빠져 있는 '장소 일반적'인 단편적 공모 기획은 작품이 공간에 이질적, 기형적으로 돌출하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 절차나 외압이 작용하고 공개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 중 주민이나 건축주가 원치 않는 작품이 선정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는 사유재산 침해 논란을 부를 뿐 아니라 차라리 설치하지 않는 방향이 낫다며 기금 납부를 선택하는 요인이 되었으며 어떤 경우는 기금을 내고 건축주가 원하는 별도의 작품을 설치하는 경우들도 있다.

필자가 몇차례 겪은 사례 중 하나는 건축주가 건축물 미술작품을 오랜 기간 기획하여 지자체 심의를 받고자 했으나 건축인허가를 빌미로 지자체와 택지개발회사가 공개공모를 요구, 시행했고, 결국 건축의 이미지와 공간적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작품이 설치된 적이 있다. 당선된 작가는 이미 여러 공모에서 논란이 있던 작가였고 작품 또한 유지보수 문제 뿐만 아니라 미관을 해치는 등 처리가 난감한 경우였다. 그 외에도 지자체 공무원, 정치권과 유착되어 작가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있어 왔다. 대표적으로 세종시 정부청사와 평창동계올림픽 때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비리가 밝혀져 관련자들이 처벌받고 작품이 공간에 적합하지 않은 작품이 철거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건축물 미술작품 뿐만 아니라 시야를 넓혀 도시공간 내, 여러 형태로 진행되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문화예술, 공공디자인 영역에는 아직 제대로 된 교육과정과 체계를 갖춘 교육기관, 뒷받침하는 정책이 부재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 문화, 예술, 인문학적 바탕, 행정, 건축, 도시, 산업적 측면 등 다양한 관점과 배경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함에도 아직 시스템이 체계화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초기 도시나 건축 계획은 설계 단계부터 시공, 완공 이후 유지보수에 걸쳐 예술적인 소양을 갖춘 설계자, 시공자 뿐만 아니라 전반적이고 복합적인 실무 경험을 지닌 공공미술전문 기획자의 협업이 필요하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에서는 이런 기획자를 알선이나 대행 정도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술적 도시환경의 바탕을 만들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공미술 작품을 위해서는 '예술산업' 전문가의 육성을 위한 교육기관이 더욱 확대되고 이들 전문가의 활동이 장려되어야 한다.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자율성이 시스템적으로 보장되고 국가나 지자체가 특정 집단과 결부/탁하여 작품선정에 관여하

지 않는다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1990년 중반 이후 공공미술이나 비엔날레, 국공립 또는 사립 미술관, 문화예술사업 등 미술계 내부의 다양한 공공 부문의 예술적인 경험 확대가 이루어져 왔다. 이를 통해 미술에 익숙해진 최근 MZ세대에게 미술작품 소비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투자의 개념 또한 포함하면서 미술을 하나의 기호로 소비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더불어 한류의 세계적인 추세 속에 한국 문화와 미술시장은 해마다 급성장하고 있다. 해외 갤러리나 경매회사의 한국 분점 오픈, 해외작가의 국내활동, 국내작가의 해외진출과 성장이 늘고 있다. 아시아 미술시장의 중심지로 생각되었던 홍콩의 몰락은 중국의 정치체제상 예상된 바지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유례없는 유동성이 갈 곳을 찾고 있다. 국내외적인 이런 상황은 한국으로 시선을 쏠리게 하고 있다. 올해 2022년 9월에 세계 3대 아트 페어인 프리즈 아트 페어가 국내에서 한국국제아트페어와 함께 열리며 사상 최대 미술에 대한 관심 집중과 매출을 올렸다.

최근 주거에 대한 인식 변화, 팬데믹으로 인한 생활과 의식변화, SNS의 발달, MZ세대의 활약 등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로 예술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분명한 점은 최근 이런 수요에 따라 다양한 공간에서 현대미술이 결합된 예술화 시도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소비자나 입주민, 건축주의 요구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고 그것은 결국 조형 예술이라는 것은 일상에서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고 미술을 이해하는 관람자의 시선과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

일상의 예술화를 위한 모색

일상의 예술화라는 목표를 위해 필자는 다양한 활동을 모색하고 제안하였다. 특히 과감하게 현대 미술작품을 기업 브랜딩에 접목해 예술적인 특화공간 창출을 아트마케팅의 관점에서 시도하려 노력하였다. 주거 단지에 현대미술관이란 콘셉트로 예술을 통한 아파트 주거문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예술작품이 단순히 생활 공간 속에 맥락 없이 이식되어 놓여진 경우들이 많았지만 기업의 이미지 제고나 브랜딩 또는 미술을 통한 환경의 변화를 주고자 하는 시도들이 늘고 있다.

필자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아트 프로젝트는 공간과의 조화, 맥락 등을 고려한 문주, 벽면, 시설물, 놀이터, 가구 등, 공간과 어우러지거나 그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 되는 큐레이션 기반의 아트 프로젝트다. 최근 사람들은 예술에 대한 관심과 이를 통해 삶의 가

치를 높이려는 욕구가 커지면서 미술을 포함한 예술이나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대중의 다양한 관점을 충족시키고 기업의 영리와 이미지 제고, 공공, 양쪽 측면 모두에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건축주, 예술가, 설계자, 시공사를 조율하고 최적의 안을 제안해 왔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법정의무의 미술작품을 넘어 추가 비용을 투자하여 초기단계부터 예술가들과 협업해 공간을 설계하였다. 각자의 지향점이 지속성을 갖고 적합하게 연결될 때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이러한 협업 사례를 가능케 했다고 본다.

필자가 의뢰 받거나 수주한 아트 프로젝트는 의사결정자의 예술에 대한 이해도와 관점,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컨설팅을 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그렇지만 의뢰자의 의견을 적절하게 수용하며 필자의 아트 컨설팅 경험과 사례 공유, 입체적인 공간 분석, 여러 단계의 제안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필자의 지향점은 매번 프로젝트마다 건축가, 미술가가 창작 욕구를 높이는 방향을 제시하고 각자의 동기부여가 극대화되는 지점을 찾아내 조율하는 일이다.

[그림 1] 인천국제공한 1터미널 아트 프로젝트

대표적인 사례로 필자가 총괄한 2019~2020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미술작품 기획, 운영 사업이다. 인천공항이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한편, 공항의 기능을 문화 플랫폼으로 확장, 공간의 개념과 조형적인 조화를 고려하여 초현실적인 풍경을 완성하며 방문객들에게 예술적인 즐거움과 세계적인 문화예술공항으로써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작품에 대해 고민하였다. 인천공항 제1교통센터, 셔틀트레인 승강장, 탑승동에 각각 차별화된 작품을 장소의 공간적 특성과 여객 동선을 고려해 해당 작품을 배치함으로써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들이 자연스럽게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백화점에는 예술작품을 통해 고객이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작품을 제시하고 아트 마케팅적 관점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제안하였다. 방문객의 예술적인 체험을 확대하기 위해 미술작품을 고려한 공간 디자인, 공간 전체가 예술작품이 되는 정원이나 놀이터, 미술관, 라운지 등 국내에서는 흔치 않았던 체험적 예술 공간을 보여주고자 했다. 공동주택 시공사에는 수주에 경쟁력을 갖추고 시행사의 자산, 삶의 질 및 환경 가치를 높이는 방향을 전략으로 제안해 왔다.

현대백화점 아트 프로젝트는 최고경영자와 실무자 간의 거리 없이 소통하고 자유롭게 제안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매번 새롭고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가능하였다. 백화점 착공 초기부터 장기간 프로젝트 담당자가와 긴밀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 예술작품을 통한 공간을 특화하고 브랜딩한 좋은 사례이다.

[그림 2] 현대백화점 아트 프로젝트

그 중에서도 특히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쇼핑몰 스페이스원 아트 프로젝트는 방문객이 가장 많이 모이는 중앙 광장과 로비, 그리고 정원과 놀이터는 예술 작품을 체험하기 위한 특별한 공간으로 기획하였다. 로비의 천정에 매달리는 작품을 중심으로 설계된 보이드 공간은 인증샷을 찍기에 최적인 장소이며 감각적인 조형미와 강렬한 컬러, 버려진 소쿠리, 그릇, 됫박 등을 쌓고 꿰어 만든 이색적인 작품과 공간의 간결함이 대비되며 신비감을 주는 장소이다. 건물 회랑으로 둘러싸인 야외 중앙광장을 비우고 많은 이들이 입체적으로 관람할 수 있게 배치한 거대한 조각으로 예술적 공간의 상징성을 부각하였다. 실내정원과 놀이터는 체험형 작품으로 동화적인 공간을 작가와 협의하며 디자인하였다. 필자는 작가의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 공간 콘셉트부터 작품의 제작 소재, 배치 등 솔루션을 제시하며 제작과 시공을 직접 총괄하였다. 500여 평이 되는 공간에 인류의 진화 과정이라는 주제를 유쾌하게 풀어낸 벽화와 특유의 개성 있는 감각이 결합된 네 개의 놀이기구가 있고 높은 천장과 유리창에서 들어오는 채광이 특징, 20여 종의 식물과 10여 동물 조각작품이 어우러진 신비로운 정원을 완성하였다.

[그림 3] 현대건설 아트 프로젝트

필자가 주도한 프로젝트 중 미술작품이 건축의 가치를 높인 주요한 결과물로 현대건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디에이치(THE H) 아트프로젝트가 있다. 차별화된 주거공간 디에이치는 '현대미술관'이라는 중의성을 콘셉트로 지니며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와 기업Hyundai가 만드는 미술관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예술가와 협업해 설치된 미술작품은 전문 큐레이션을 바탕으로 조각 공원, 문주, 외벽, 놀이터, 파고라, 조경시설, 보도블럭, 아트퍼니처, 주차장, 사이니지 등 다양하게 입주민이 예술적인 경험을 갖도록 설계되어 이제는 아파트 단지의 필수 기준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여러 아파트 시공사와 시행사 요청으로 아트 컨설팅을 진행하고있다.

앞으로 필자는 보다 더 다양한 공간, 건축, 인/익스테리어, 가구나 제품 등과 협업하고 이를 통해 일상의 예술화를 실현하여 많을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한 공간과 삶을 느끼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필자 소개 |

공공미술 기획자 이은호
2019 ~ 2020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미술작품 기획, 운영 사업 아트디렉터
2014.04 ~ 현재 : 현대리바트 아트랩 디렉터
2010.06 ~ 2014.04 : 가나아트갤러리 큐레이터
2005.11 ~ 2010.05 : 설치미술가, 독립큐레이터
http://leeeunho.net / http://hyundailivart-artlab.com

03

미술작품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선택적 기금제 개선 방안

이 성 옥
(미술제도개선 TF팀 공동위원장)

미술작품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선택적 기금제 개선 방안

– 70%에서 100% 이상으로 확대하기 –

이 성 옥(미술제도개선 TF팀 공동위원장)

서론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해외의 퍼센트법 제도를 참고하여 시민의 문화예술향유와 도시경관의 개선, 예술가의 창작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72년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권고 사항에서 출발했다가 의무사항으로 바뀌고 몇 번의 법 개정을 겪으면서 2011년 개정부터는 건축주가 직접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었다.

기금 출연은 기존의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가 가진 한계점을 보완하고 건축주의 선택권 확대와 제도 완화를 위한 시도였으며, 기금을 통합 관리하여 체계적인 공공미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2011년도부터 시작된 기금 납부액 중 2019년 기준 공공미술사업에 사용된 금액은 10%에 불과한 30억에 불과하다.[1] 또한, 선택적 기금제의 납부 비율을 직접 설치비용의 70%로 낮춰주면서 건축주와 작가 사이에 이중계약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기금의 사후 활용방안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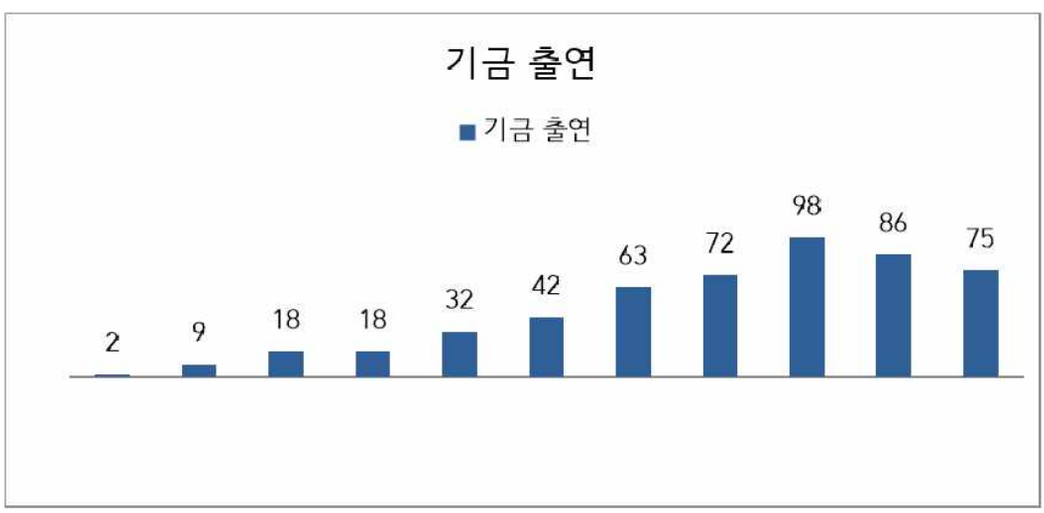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선택적 기금제가 가진 문제점과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합리한 상황을 살펴보고, 문제해결을 위해 기금 비율 확대와 운영방안 체계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를 보완한 것을 제안한다.

1) 이상헌 의원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통해 걷은 기금 낮잠”, YTN, 2019년 9월 27일, https://www.ytn.co.kr/_ln/0106_201909271700041932

본론

1) 선택적 기금 제도의 운영과 실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12조 6항에 따라 건축주는 법정 미술작품 설치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게 되어있다. 법 개정 당시 미술작품을 직접 설치해야 하는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고, 기금을 조성하여 다양한 공공미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여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실제로 2011년 기금 출연 건수는 2건에 불과했지만, 2017년도에는 63건, 2021년도에는 75건으로 해가 갈수록 기금 납부액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2011년도부터 2021년까지의 기금 출연 건수를 나타낸 도표로 기금 출연이 완료된 내역만 집계에 포함하였으며, 아직 접수 중인 건수를 포함하면 2021년도가 113건으로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2)]

더욱이 최근 몇 년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제도가 강화되면서 심의 부결률이 높아졌고, 의도와 상관없이 건축 준공을 위해 반강제적으로 기금에 출연하는 빈도가 늘며 제도 개선에 대한 예술가들의 불만과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미술작품 심의에서 6~7번 이상 탈락하는 작품이 늘어나면서 건축물 준공 승인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미술작품 설치를 포기하고 기금으로 내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렇게 10년 이상 모인 '선택적 기금'의 행방과 사용계획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도

2) "기금출연확인," 공공미술포털, 2022년 10월 10일 수정, 2022년 10월 2일 접속, https://www.publicart.or.kr/confirm/fundList.do?menuId=33

문제다. 건축물 미술작품 대신 납부하는 기금이므로 공공미술 활성화를 위해 사용되어야 함에도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편입되어 통합적으로 관리되면서 해당 기금이 정확히 어떤 식으로 관리되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국정감사에서 2011년도부터 걷은 기금 300억 원 중 실제 공공미술사업에 쓴 액수는 10%에 불과한 30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도 있으며, 개인의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방식임에도 납부 주체과 관리 주체 및 집행 대상이 불일치하면서 기금이 해당 지역으로 재분배되지 못하는 역차별이 발생하며 건축주의 기금 출연 의지를 독려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2) 건축주와 작가 간의 이중계약 문제

현재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경우 건축비용의 1% 이하 금액을 지자체 조례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하며, 선택적 기금제 도입 이후로는 법정 금액의 70%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신 출연할 수 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축물 미술작품제도를 일종의 조세 제도처럼 여기고 있으며, 건축물 주변에 설치되는 작품을 자신의 재산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금 출연 자체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법을 개정하면서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금 출연을 유도하기 위해 본래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할 금액의 70%로 그 부담액을 낮춰준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오직 건축주의 입장만을 고려한 것으로 건축물 설치로 인해 큰 이익을 얻는 건축주가 개발이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공공기금의 성격임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비율을 낮춤으로써 여러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건축주들이 선택적 기금의 70%를 자신이 지급해야 할 최대의 비용으로 산정하고 작가들에게 이중계약을 강요하며 미술작품을 법정 금액의 50~60% 미만으로 설치할 것을 강제한다. 이렇게 한번 이중계약이 이루어지면 예술가들은 실제로 법정 금액의 절반만을 받고 미술작품을 제작하게 되며 실제로는 받지 않는 금액까지 포함한 100%짜리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다. 건축주는 이중계약으로 인한 리베이트 금액을 챙기면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비용처리까지 할 수 있으므로 막대한 금액의 세금 탈세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 A 작가의 계약사례를 살펴보면 그 심각성이 확연히 드러난다. A 작가는 법정 금액 1억2천만 원으로 미술작품 계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금액으로 미술작품 심의까지 완료했다. 하지만 이중계약 내용을 보면 실제 A 작가가 건축주로부터 받은 금액은 7천3백만 원에 불과하며 4천9백만 원이 이중계약 내용에 따라 건축주 혹은 기획사에

돌아간다. 하지만 미술작품 심의는 1억 2천만 원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가는 그 금액에 맞춰 작품의 규모나 내용을 결정하게 되며, 실제로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제작을 진행하기 때문에 작품의 완성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 완성도를 지키기 위해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고 작품을 제작할 수밖에 없다.

3) 기부금의 사용 용도 및 방법의 구체화 필요성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정부 출연금이나 개인 혹은 법인의 기부금 등 여러 경로로 출연한 기금을 중앙기금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건축주가 납부한 금액은 온전히 공공미술 사업과 건축물 미술작품 유지보수에 사용되어야 함에도 실질적으로는 대다수의 건축물 미술작품이 하자보수 기간 2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으며, 이완 관련해서 별도의 대안이나 법 개정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기금의 당위성과 건축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역 건축주들이 낸 기금이 그 지역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에도 중앙기금에서 그 관리와 집행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본래 혜택이 돌아가야 할 지역 주민들이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박탈당하며 지역 역차별과 불합리함이 발생하고 있다.[3)]

경기도에서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을 위해 미술작품 검수단을 2019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에 설치된 미술작품의 전수조사와 하자 점검, 신규 설치작품 검수 등을 시행하고 있다. 실제 미술작품 검수단이 현장을 방문해 미술작품의 하자와 보수 필요성을 보고할지라도 도는 해당 미술작품의 보수를 건축주에게 권고할 뿐이며 관련 예산을 배정하거나 법적으로 강제할 그 어떤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캐나다 토론토의 사례를 보면 기금을 새로운 미술작품이나 공공미술을 설치하는데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미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의 유지보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4)] 우리나라도 이른 시일 내에 기금제도를 보완하여 공공미술 사업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전국에 설치된 수만 개의 미술작품을 연구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와 체계적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

3) 조현철, “김승원 의원,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지자체 기금으로 전환 필요”, NSP 통신, 2021년 10월 8일,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530530

4) 류선정, “도시경관의 미적 제고를 위한 공공미술 기금운용 가이드라인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8권 제5호, 2017년 10월, pp. 88-89.

결론

선택적 기금제도는 공공미술의 다양성 강화와 제도 완화, 문화예술 활성화 등의 목적에서 도입되었지만, 운영의 불투명함과 소극적 집행, 70%로 제한된 금액으로 인해 불법적인 이중계약과 같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일부에서는 건축 시 일정 비용을 미술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국가가 부담할 일을 민간에 전가하는 일이라 비판하고 있지만, 이것은 형식상 건축주가 비용을 부담할 뿐 실질적으로는 건축주가 얻는 이익 일부를 세금 성격의 공공기금으로 내는 것으로, 단지 건축주의 편의를 위해 기금액을 낮춰주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이 세금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형적 제도가 만드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기금액의 조정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일 것이다.

무엇보다 2022년도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적 위상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와 기금제는 우리나라 예술가를 전 세계에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소중한 발판이자 버팀목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앞으로 법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재 70%로 제한된 기금을 100% 이상으로 확대하며 제도 운용을 개선하고, 새로운 관리 기구 신설을 통해 우리나라를 문화예술 강국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필자 소개 |

이성옥
미술작품 제도개선 TF팀 공동위원장
한국조각가협회 부이사장